결혼이민자 지원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상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980년대 이후 단일민족의 전통을 지켜온 한국 사회에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초창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대부분이던 것이 1990년대 이후에는 농촌 총각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면서 국제결혼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표 1> 결혼이민자 현황: 연도별 증감 추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5.
인원(명)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126,290
증감률(%)	-	28.0	28.5	31.4	25.0	17.7	11.0	7.6

우선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를 보면, 1990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1.2% 정도였던 것이 2002년에는 3.7% 그리고 2005년도에는 13.6%까지 증가하였다. 전체 결혼이민자들의 수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2002년에는 약 3만4천명 정도였던 것이 2007년도에는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이 증가한 11만 명에 이르렀고 2009년 5월에는 그 수가 12만6천여 명으로서 7년 사이에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 중 약 88%는 여성들이다.

<표 2> 결혼이민자 현황: 국적별·성별 (2009년 5월 현재)

구분	합계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타이	기타
전체 (%)	126,290 (100.0)	35,304 (28.0)	33,643 (26.6)	29,171 (23.1)	6,199 (4.9)	4,997 (4.0)	2,790 (2.2)	2,316 (1.8)	2,091 (1.7)	9,779 (7.7)
남 (명)	15,301	6,474	3,213	152	168	506	10	43	41	4,694
여 (명)	110,989	28,830	30,430	29,019	6,031	4,491	2,780	2,273	2,050	5,085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 출신이 다수이며 구소련 지역의 국가 출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다양성과 함께 생활문화적 다양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결혼이민자들의 주거 지역을 보면 약 56% 이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출신지역별로 거주 지역 또한 집중되어 있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족 출신들은 서울의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안산, 수원, 성남 등지에 집중 거주하며, 동남아시아 출신들은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김포, 인천의 남동, 경남의 김해, 충남의 천안 등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낯선 타지에서 살아가는 외국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적인 국제결혼 대행업체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인·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의 불화 및 폭력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한편,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자들은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해야하는 부담감은 물론 언어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들의 자녀교육과 취업 및 사회참여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편입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아직은 소수자들인 이들 결혼이민자들을 우리사회에 편입시켜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특히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지지 못하였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거주 외국인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정책만 일부 수행할 뿐 결혼이민자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크게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담부서가 명확치 않거나 지원인력이 충분치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 지원부서를 만들어 결혼이민자 지원행정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민원해결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외국인 거주자 전용 원스톱(On-Stop) 행정민원 서비스 창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부족과 획일적인 지원으로 인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결혼이민자 및 가족수에 비례하여 적정규모로 차등 지원하는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 및 적응교육이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국어 교육 및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인 교사와 교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들의 배우자들과 자치단체 공무원 및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다문화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에 적합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이 지역모임과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반상회, 시민단체 모임, 아파트 부녀회, 주민자치회, 지역축제, 마을 회의, 마을 체육회 등에 결혼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갖게끔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결혼이민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은 이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관심과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결혼이민자와 지역 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